

법사위 국감, 세월호·수리온 '정권눈치' 질타

여 "김영한 비망록, 감사원 언급 사전조율 의심" 야 "수리온, 정권교체 후 발표... 인적 청산 보복"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감사'와 '수리온 헬기 감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영한 비망록의 감사원 관련 구절을 제시하며 '세월호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수리온 헬기 감사결과 공개가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닌지' 등 각각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모두 이러한 의혹 및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와 관련해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의심받는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감사원에서 세월호 참사 감사할 때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황찬현 감사원장은

"조율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감사원이 7월 8일 세월호감사 중간발표를 했는데, 비망록을 보면 6일에 감사원 보고자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비망록에는 감사원이 많이 등장한다. 감사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김 전 수석의 2014년 10월 8일 업무일지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을 건데 미리 받아 코멘트를 주라'는 취지의 구절이 있다"며 "이것은 단순히 보고받는 걸 넘어서서 코멘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물었다.

황 원장은 "감사결과를 확정된 게 10

월 2일이다. 감사원에서 확정된 결과는 임의로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코멘트를 받아서 수정했다는 의심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10시 52분인 것으로 작성됐다. 실제 9시 30분에 보고받은 시간보다 1시간30분 늦은 것"이라며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려고 일부러 보고시점을 늦춰 작성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황 원장은 "(10시52분은) 첫 보고시점이 아니라 승객이 배에 갇혀 있다는 보고시점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역시 비망록에 '감사원'이 적힌 구절 여러 개를 보여 주며 "이게 한 두 번이면 오비이락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딱딱 맞는다. 이렇고 또 몇몇하게 전혀 조율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리온헬기 감사결과 및 대통령 수시 보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 2년 동안 3번 감사를 했다. 어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황 원장은 곧바로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느냐"고 받아쳤다.

여 의원은 "왜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했느냐.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며 "수리온 2차 감사에서 11가지 기재결함을 지적했고, 발표는 작년 7월에 했다. 발표시점에는 모든 결함이 개선됐는데 왜 개선된 거까지 다 발표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부처마다 적폐청산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감사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자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각종 의혹이 넘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인제야 제기되는 것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거나 어떤 이유든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승용 "전남, 노후관 개량실적 전국 꼴찌"

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실적이 지난해까지 전남도가 최저실적을 보인 가운데 올해는 아예 개량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지역행평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이 19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노후관로 교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227.4km의 노후관을 교체했는데 전남이 4.3km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더구나 수자원공사는 올해의 경우 노후관 23.1km 개량계획을 세우면서 전남은 아예 개량계획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든 지역차별을 할 것인가"고 கே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또 "40년이 경과한 광양공업수도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예산투입을 하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당장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농어촌공 공직자 모럴해저드 심각"

한국농어촌공사의 비리가 다시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징계현황은 2015년 20명, 2016년 44명, 2017년(8월 기준) 70명으로 2년 사이 3.5배가 늘어났고, 최근 3년간 총 134명의 징계현황 중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70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징계 처분명목으로 분류하면 자금부당·편법 집행, 부적정 자금계상 등 자금관련 징계가 총 68건으로 나타났다.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인한



징계는 21건이었다.

특히, 1·2급 징계위원의 징계사유를 보면 뇌물수수, 인건비 부당집행, 편법집행, 부적정 계상 등 자금관련 징계가 70명중 60명에 달해 고위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자체감사 수준을 높이고, 직원 청렴도 교육강화, 비리발생 사례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국유지 무단사용 전남 가장 많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국유지의 무단사용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9일 내놓은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사용 적발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4,458건중 전남이 1,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926건, 전북 629건 순이었고, 강원이 101건으로 가장 적었다.

무단사용 유형별로는 작물식재·무단영농이 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출입로 무단사용 443건, 전주·가설건축물 등 무단설치 368



건, 물건 무단야적 106건 등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국유지 무단사용을 방지했다가 차후 적발해 일반 점·사용료의 120%를 가산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개인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농어촌지역 국유지에 대한 무분별한 목적의 사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으로 결국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일 "전국 186만명 상수도 이용 못해"

상수도를 통해 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86만명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이 19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미급수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급수 인구가 전국적으로 18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급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전체 186만명 중 약 33만여명이 미급수로 인해 원활한 물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경북 26만8,000명(14.3%), 경기 26만5,000명(15.1%) 순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2년 62.2%, 2013년 65.9%,



2014년 69.1%, 2015년 71%로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 지역 99.3%와 읍지역 94.5%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물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안전한 이용이 이뤄지도록 광역상수도 직접보급, 지하자원 확보시설, 해수담수화 시설확대 등 국토부와 수공·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적극적 예산투입과 실행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내가 한번 보여주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중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 안 되는 면적"이라며 직접 누워보고 있다. /노회찬 의원실

교문위 국감, 영화·출판계 블랙리스트 '도마'

여 "진상규명" 공세...야, 부실·방만경영 지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출판·영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화부 산하기관들의 부실·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2016년 진흥원이 진행한 '아가'는 중국 도서전' 선정되지 가운데 일부 부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문제부에서 내려왔고, 진흥원이 이를 실행한 일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진흥원은 회의록까지 조작하면서 일부 도서를 배제했다"며 "조작을 김 원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노영재 의원 역시 "지난해 출판진흥원이 주관한 '초록·샘플 번역 지원사업'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한 도서 4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화부진상조사위원회가 전면조사를 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과 관련된, 정부 측의 조직적 상영방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다이빙벨' 예매기록을 공개하면서 "특정 ATM기를 통해 30여분만에 115장이 한꺼번에 예매됐다"며 "예매만 하고 관람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빈자리 만들기'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관들의 방만운영에 대한 지적이 주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4개 회사에 471억원을 출자했지만, 아직까지 배당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히 1992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290억원을 출자했지만 25년간 수익이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레저코리아(GKL) 직원들의 '공짜 해외여행' 의혹과 관련해 질타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GKL 직원 246명은 10년 동안(2007~2016년) 5개 카드사(법인카드 4개, 직원복지카드 1개)로부터 항공권·숙박비·식비 등을 지원받아 해외출장 형태로 무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민-바른연대·통합론 '신중모드'

"예단상황 아냐"...통합 가능성 '부정적' 관측도

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연대·협치의 대상인 국민의당을 끝까지 설득해 개혁입법연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이날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통합론 논의에 속도가 붙는 것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

위기가 감지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9일 양당 통합논의와 관련, "서로간의 이해관계나 명분·민심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향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예단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현재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

고 있는 만큼 구성성 없는 통합론보다는 당의 우선과제인 '적폐청산'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원내 관계자는 "국감이 한창인 지금은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때"라며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두 정당의 통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 같이 합치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오늘 '대정부권고안' 발표

중단·재개... '국민적 관심' 쏠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이날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정부권고안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 장면은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고리5·6호기 문제'는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 될 정도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사안인 만큼 공론조사 결과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과 건설재개 중에 선택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종합토론회 폐막식에서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사회의 시민의식은 대한민국의 압축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정당 통합론'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국민의당과의 협력에 공을 들인 민주당으로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통합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그 파장이 만만찮은 만큼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다만 두 정당의 통합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호남 중진의원들의 중심으로 통합에 부정적 기류도 있는 만큼 일단은 국정감사에 매진하면서 상황